

정 / 책 / 분 / 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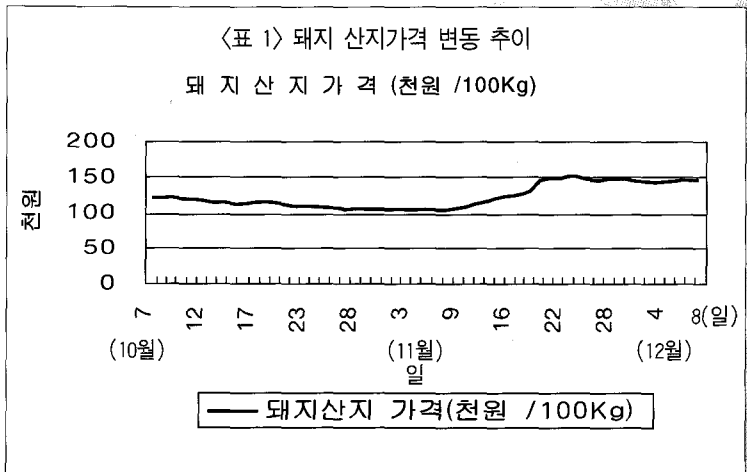
# 수출중단 이후 양돈산업의 정책방향



김정주 교수  
건국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우리나라 양돈업계는 그동안 긴 호황을 마감하고 침체의 깊은 늪으로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구제역 발생여파로 돼지고기 대일 수출길이 막히자 수출물량은 자동적으로 국내 시장으로 쏟아진데다가 경제가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돼지고기 소비가 위축되었는데 어미돼지 수는 99년말에 887천두에서 지난 3월말에 914천두, 6월말에 936천두로 오히려 늘

어났으니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어들어 결국 가격 하락으로 연결되고 있다. 돼지가격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2개월간 성돈 두당 산지 가격을 <표1>으로 그리면 아래와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월 8일 현재 성돈 100kg 기준 두당 149천원으로 이는 11월초 산지 돼지 가격이 10만원대로 바닥을 치고 11월 23일 현재 153천원 선으로 다



소 상승하였으나 1년전 가격 190천원까지 회복하기에는 아직 먼 상태이다.

그런데 이러한 회복현상은 돼지 가격이 두당 10만원 수준까지 하락하자 정부와 업계가 나서서 수매를 단행하였고 연말 연시 선물용 돼지 가공제품을 위한 반짝 수요가 작용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결코 근본적인 과잉공급이 해소되지 않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어미돼지의 감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또 다시 돼지 가격이 폭락할 것임은 쉽게 예견되는 일이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결과가 이렇게 진행될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어미돼지 수를 줄이는 일을 실행에 옮기기가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것은 농가가 모든 줄이기에 동참하지 않을수록 무임승차의 반사이익을 노릴수 있음을 알고 모든을 줄이자는 총론에서는 동의하나 각론에 들어가서 자신의 이익을 따지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의 이기심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까지 농축산물이 공급 과잉될 때마다 해결책으로 자율적 생산감축이라는 처방을 써 왔지만 결국 생산감축에 앞장섰던 농가만 손해를 보았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율적 생산감축에 대한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농가간 힘겨루기가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의 양돈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적응능력이 없는 농가부터 순차적으로 무너지게 방치하려 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경제문제를 떠나 사회정의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심각함이 있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라도 대규모 농가부터서 자발적으로 모든 수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일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양돈 불황을 이길 방법이 따로 없어 보인다. 즉 자율적 감축의 한계가 인정되지만 지금까지의 감축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항구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불황에 대비한 법적 자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평소에 자금을 확보해 두었다가 공급이 과잉될 때 업계가 앞장서서 대량 수매하고 소비자를 상대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 대안으로 일정한 경지 면적을 확보한 만큼만 어미돼지 보유두수를 허용하는 양돈 허가제를 도입하여 환경오염도 막고 자원도 활용하며 동시에 어미돼지 보유두수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쓸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는 현재 독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써 얼핏 보기에는 민간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수단이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지만

양돈으로부터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분뇨처리를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의 농지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인정한다면 권장사항이 되고도 남는다.

두 번째 대안으로 불황에 대비한 법적 자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평소에 자금을 확보해 두었다가 공급이 과잉될 때 업계가 앞장서서 대량 구매하고 소비자를 상대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조금(Check-off)이란 20세기초에 서구의 노동조합이 활동비를 각출하는 방법으로 모든 종사원의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check-off) 한데서부터 유래된 용어로서 일명 check-off funds 라고도 한다. 그후 농산물의 품목별 생산자단체가 자체의 공동활동을 위한 비용 염출 방법으로 도입, 활용하기에 이르렀고 오늘날

에는 생산자나 수입업자가 상품을 출하할 때마다 일정한 소액을 떼어 적립해 두었다가 개별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등 참여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활용하는 제도로서 농업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농산물에서 이를 적용·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양돈농가가 생산물을 출하할 때마다 일정액을 적립해서 돼지고기 소비촉진 광고, 신제품 개발 등에 씌우려서 돈육시장의 소비를 촉진하여 양돈농가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어느 산업을 막론하고 자구대책을 위한 비용은 그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구성원 모두가 자진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자조금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가장 민주적이고도 선진된 제도이다. 그러나 이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기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입법화함으로써 법적 자조금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세 번째 대안으로 양돈업의 계열화 사업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양돈업의 계열화 사업 체계는 사료의 제조에서부터 시작하여 자돈공급, 비육돈 육성, 도축과정을 거쳐 최종 소비재를 위한 돈육이나 가공제품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경영체(Integrator=계열주체)가 일괄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여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농업부문의 수직적 계열화 사업은 농업으로 대표되는 1차 산업과 공업으로 대표되는 2차 산업, 그리고 상업으로 대표되는 3차 산업이 하나의 경영체 관리하에서 상호 연관되도록 묶는 방안이다. 현재 육계산업에서는 그동안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따라서 양돈업계에서는 양계업계의 노하우를 그대로 참고하여 시행착오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요즘처럼 남북경제 협력이 활발한 때라면 과잉된 돼지고기를 북한으로 보내는 국민 운동 같은 것을 벌이는 것도 양돈불황을 탈출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양돈**

**어떻게 해서라도 대규모 농가부터 자발적으로 모은 수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일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양돈**

**불황을 이길 방법이 따로 없어 보인다.**

**즉 자율적 감축의 한계가 인정되지만 지금까지의**

**감축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항구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